

이달 21일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 바이든 취임 후 첫 회담 靑 "한반도 비핵화 등 논의... 한미동맹 발전 기대" 구체적 방미 일정 추후 확정... "사전·사후 협의 중"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20일 워싱턴 DC에 도착, 이른날인 21일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오르는 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상회담과 별개로 문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에서 소화할 일정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9년 9월 24일 미국 뉴욕 유

엔총회 참석 계기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맞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정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 논의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에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식 오찬한 일정 확정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했던 앞선 사례를 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출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미 일정과 관련하여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사전, 사후 일정을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 논의 가능성을 두고는 "쿼드 관련해서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쿼드에 대해서는 개방성·포용성·부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 번영에 기여하면 어떠한 것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준비서 공개 의무화

항목·범위 등... 민주 윤준병 의원, 개정 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전라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돼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결시켰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간 표류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논의 당시 국회의원의 의견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빠졌던 처벌 조항이 별도 입법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뉴스1

이에, 윤준병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을 찾아 실패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항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국민생활기준2030 9월까지 핵심공약 반영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교육·돌봄 등 8개 분야의 신복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9월까지 핵심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각 영역별로 국민 생활 기준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위원회의 최종 목표"라며 "최근 확정된 정책과제들을 세부 검토를 통해 오는 9월까지의 구체적인 국민 생활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 퇴임 전인 지난 2월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설치했다.

신복지제도의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국민 삶의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적정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골자다. /뉴스1

김부겸 총리 청문회 이달 6~7일 열기로

국회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5월 6, 7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의결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고, 여야 간사에 각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결의 의결했다.

당초 특위는 5월 3, 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청문회 운영 방식, 증인·참고인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일정이 순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차녀와 사위를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조국혁신'의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중 경제민주주의 21 공동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 15명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를 제외한 13명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합의 끝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5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

"청탁금지법, 사후 통제 장치... 이해충돌방지법은 예방 장치 사후 통제, 사전 예방책 모두 마련... 공정성 강화 계기 믿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최초로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결시켰다.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간 표류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논의 당시 국회의원의 의견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빠졌던 처벌 조항이 별도 입법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뉴스1

새만금 관광레저 사업시행 공모 '코로나19 시대, 노인돌봄 논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6월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SK의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에 이어, 새만금이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테마비를 조성(300만㎡) 취지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 체육 시설 등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전북 성평등 포럼 개최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은 '코로나19와 젠더위기: 노인 돌봄 현안과 대응' 주제로 제1차 전북 성평등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심화, 여성과 가족 중심의 돌봄노동 부담 급증 등 현행 노인돌봄 체계의 실패를 파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삼식(한양대 학교 교수,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 등 복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해져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이 확대"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발제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돌봄 노동이 주로 가족과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사적 영역과 민간시장, 여성에게 전가한 돌봄체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의 시간, 장소, 비용을 사회와 가족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고, 사회를 어떻게 돌봄 관계로 재조직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구제역 백신항체 조사 모니터링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4월 중 우제류 1만2,000호 51만7,000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항체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난 200호를 표본추출해 농가당 5두씩 체혈 검사를 진행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추가 검사(16두)를 진행한다. 추가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파태료부과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및 현장정검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유호상 기자

자살유발정보 배포자 신고 강화

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험자 구조 위해 6월까지 감시

전북도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6월까지 자살유발정보 유포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추진한다.

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북경찰청 등에 신고할 계획이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유포자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당부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질 낮은 기사들 포털에 모여 악취"

열린민주 김의겸 의원 "전통 저널리즘 작법에 맞지 않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질 낮은 기사들이 포털에 모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어제 이날만 명칭, 정세균 매력 없어, 이재명도 쉽지 않아 민주당은 완전히 맛이 갔다" 이런 기사들이 포털에 오래 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종이신문을 확인해 봤는데 이 기사가 없다"며 "전통 저널리즘의 작법에 맞지 않는 기사이기 때



문에 없는 것이다. 참피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피하지 않은 기사만을 포털에 내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선택해서 기사에 후원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자"며 "공영 포털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분배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의 손에서 시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훨씬 더 민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뉴스 포털인 공영 포털을 만들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도 제안한 바 있다. /뉴스1

선거연수원, '제1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dvicedu.g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은 오는 8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선거·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경제·사회, 교육·과학, 역사·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편성되며, 수강생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유호상 기자